

#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3월 23일(통권52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청년 일자리대책 : 특단의 한시적 처방으로는 안 된다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작년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악의 수준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좀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없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대책을 3월 15일 직접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층의 지지로 집권한 정부로서, 분명 과거 어느 정부와 달리 적극적인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청년일자리추경예산은 사실상 지난 7월의 추경 이후 1년도 안되어서 제기되는 것이다. 작년 정부출범 시의 일자리추경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공부문일자리도 만들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80만개 일자리가 생기니 마치 정부만 믿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하였다. 앞으로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몇 달 지나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반시장적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당장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고,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생활기

반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심야영업의 감축으로 감소하고 무인점포는 늘어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서 시설 자동화나 자본투자를 서두를 것이다. 같은 근로자로서 대기업 근로자들은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임금인상을 올 연말에 요구할 것이다. 이는 또한 신규채용을 더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반시장적 노동정책으로 청년실업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일자리추경을 실행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석 달 남짓인 현재 또 다른 일자리추경안을 발표하였다. 내용면에서는 기초가 완전히 바뀌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쏙 빠지고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어 줄 터이니 중소기업 아무 일자리나 들어가고 창업을 하라는 것이다.

청년은 앞으로 족히 30년은 일하고 그 다음은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으니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다. 정부의 무제한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환경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거의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발표된 청년 일자리대책들이 거의 한시적이어서 이 정권이 끝나면 혜택도 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대책의 수혜자들은 사실상 한시적 수혜자가 되어서 이후에는 나이만 더 들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도 지금은 당장 정부의 대책에 호응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열어 두겠지만 기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 고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대책들이 내용 가운데 '청년 일자리대책들이 필요성'은 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감소했는지를 매우 잘 요약하고 있다; 우선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청년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가 줄었다. 둘째,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이 감소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위축되었다. 넷째, 교육 동질화 등으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청

년일자리 창출이 제약되었다.

정부는 누가 보아도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해결하면 청년고용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능동적으로 기술혁신과 자동화에 더 집중적 지원을 하면 이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당연히 이에 필요한 인력은 적극 양성하면 된다. 평균화가 아닌 수월성을 전제로 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도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

둘째,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감소했으면 규제완화로 신산업을 육성하면 된다. 의료,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우리 청년들은 ICT에 매우 잘 적응되어 있어서 이 부문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서 기득권 기성세대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셋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쏠림 현상으로 당연히 대학의 특성화와 차별화, 그리고 정원축소를 목적으로 한 획일적 대학평가제도의 철회로 해결하면 된다. 대학도 이제는 학생 1인당 교수 수를 늘려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정규직 보호가 문제면 과감히 정규직 보호를 철회하면 된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성과급을 도입하면 된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만 찾으면 그것으로 만족이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계발로서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청년 일자리대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한 정부의 어떤 청년 일자리대책도 무효하다.

아쉽게도 청년 일자리대책에는 이러한 관점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핵심정책인 신규고용지원정책은 오히려 핵심을 비껴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만 들어가면 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3년간 주어서 대기업 근로자만큼 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대기업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에서 정규직들이 반발하는 것과 같다. 당장 대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다. 자신들은 대기업 들어오기 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 과외비 및 학원비를 들였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한다고 반발할 것이다. 작년에 취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한편으로 재취업을 생각할 것이다. 자격요건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3천만 원짜리 로또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많은 반발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면 돈을 더 준다는데 기존 사업장을 닫고 이름만 바꾸어 다시 개업해 볼 것을 생각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2쪽에서 한시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문제는 절대 한시적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다수의 정책이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청년들은 앞으로 60년 이상 사회의 주인으로서 일하고 가정을 꾸미고 안정된 노후를 계획해야 하는 세대다. 아무리 혜택이 좋은 제도라도 한시적이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회주의적 행태만 낳아서 예산만 낭비하고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취업을 하면 결혼 걱정이 들고, 다음에는 살 집과 육아와 교육, 그리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3년 동안 취업은 해 있겠지만 사회 첫발은 결국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 보장된 것도 없이 또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사회에 나가는 것 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평생 안정된 직장, 양질의 교육환경, 노후보장이 가능한 직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원한다. 따라서 본질은 가정, 육아와 교육, 그리고 노후보장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정책의 기본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대책에는 우선 청년들에게 큰 틀의 경제사회적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육아, 교육, 노후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 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

고 안정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에 따른 일관성 있는 청년 일자리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은 노인 일자리대책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둘째, 이제는 원칙과 기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청년 고용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부었음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은 변칙적 정책 때문이었다. 모든 정책의 일관성은 최선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기존제도의 일관성 유지는 차선이다.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노동시장을 흔들지 않는 것이 차선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은 정책을 선택과 집중으로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실업을 줄일 것이다.

셋째, 정책대상의 폭을 줄이고 집중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책 대상에서 34세를 청년이라고 강변하면서 사회적으로 '중년'을 청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책 대상을 좁히고 보다 효과있는 지원이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생계와 직접 연계되는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에서 혁신적 창의적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은 글로벌 경제 구조하에서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철저히 검증하면서 이끌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모든 정책은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심각한 갈등만 유발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